

광주·전남 與 의원들에 '정계개편' 물어보나...

13명중 8명 "통합신당 필수" 5명은 관망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의 의원 가운데 8명의 의원이 통합신당론에 찬성하고 나머지 5명의 의원들도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호남의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여당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통합신당쪽에 줄을 서는 것은 주목되는 현상이다. 여당의원들의 이런 선택은 전반적으로 우리당 간판으로는 차기 총선에서 당선이 어렵다는 현실론과 함께,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지역 분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도·실용세력 중심에 서야"

양형일(광주 동), 염동연(광주 서갑), 주승용(여수 을), 우윤근(광양·구례), 김태홍(광주 북을), 김동철(광주 광산), 김성곤(여수 갑), 유선호

(영암·강진) 의원 등 통합신당론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8명의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정권재창출을 위한 통합신당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확고한 입장과 함께 추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대론 한나라에 정권 내 준다"

특히, 김동철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얼치기 개혁파들이 소모적 이념 논쟁과 돌출 행동 등을 서슴치 않아 열린우리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측면이 크다"며 "모두 다 같이 갈 수는 없으며 중도·실용세력이 이번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병문(광주 남), 강기정(광주 북갑), 이영호(완도·강진) 의원 등은 통합신당론에 반대하거나 보다는 정계개편의 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

다는 관망적 태도를 나타내 전반적인 기류는 '통합신당 불가피' 쪽으로 흐르고 있다.

친노 직계인 서갑원(순천) 의원과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동채(광주 서을) 의원은 명확한 입장 표명보다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부 의원들이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은 정계개편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태여 앞장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통합 신당이 현실화됐을 경우 과연 지역 확보를 자신할 수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민주당 등과의 통합신당이 이뤄졌을 경우 일부 광주·전남지역 여당 의원들은 지역 확보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바람에 힘 입어 당선된 측면이 강한 광주·전남지역 여당 의원들이 열린우리당의 해체와 함께 통합신당 창당이 불가피하다

는 기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힘한번 못쓰고 한나라에게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합만 지역구 확보 어려워"

수구·보수 및 영남 색채가 강한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김대중 정부부터 이어져 온 민주세력의 집권 성과 등 역사적 흐름이 왜곡되고 이제 겨우 발현된 틀을 잡아가고 있는 호남도 다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민주세력 대통합으로 정권재창출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여론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민주화 세력을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통합신당을 창당,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도 지역 여당 의원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계개편을 둘러싼 여론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김근태 의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신당 찬성								관망				
양형일의원	염동연의원	김태홍의원	김동철의원	김성곤의원	주승용의원	우윤근의원	유선호의원	정동채의원	지병문의원	강기정의원	서갑원의원	이영호의원

親盧-非盧 정계개편 '살바 싸움'

우리당 재보선 패배후 첫 의총...조기전대·통합수입기구 등 총돌

여권발 새판짜기의 향방을 둘러싼 열린우리당내 계파간 갈등이 2일 의원총회에서 표면화됐다.

예상됐던 '격돌'은 없었지만 당의 진로와 정계개편 방향을 바라보는 주요 계파의 시각차가 분출됐다. 한 당직자는 "각자의 입장에서 처절하게 얘기한 자리였다"며 "정계개편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큰 틀에서는 '친노(親盧)'와 '비·반노(非·反盧)'세력이 대립 축을 이루고 있지만 양쪽 세력 모두 계파에 따라 입장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사분오열'된 여당 내부의 혼돈상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조기 전대=조기 정당대회 소집 문제를 놓고는 친노·반노간의 대립각이 선명했다. 친노그룹은 의총장에서 말을 아꼈지만 '장외'에서는 조기 전대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초선 의원 모임인 '처음처럼' 소속 최재성 의원은 "당헌·당규상 보장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전당대회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비·반노 성향의 통합신당파들은 조

기 전대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반대했다. 탈 계파 초선모임인 '국민의 길' 간사 전병헌 의원은 "조기 전대는 당력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통합 수입기구 구성=최대 쟁점인 '통합수입기구' 구성 문제 역시 친노 대 반노그룹간 대립이 기본축이다. 통합신당에 적극적인 반노그룹은 당장 당내 기구를 만들어 정계개편 논의에 착수하자고 분위기를 몰아갔으나 친노그룹 쪽에선 "정기국회가 끝난 후 조기 전대를 열고 거기서 논의하자"고 반대했다.

김근태 의장은 의총에서 "당내에 정계개편 논의의 기구를 구성해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는 제안이 있는데 의견을 모아보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노직계 그룹인 이화영 의원은 "왜 그리 서두르느냐"며 "지금 같은 정기국회에 전념하고 나중에 전당대회를 열어 그때 논의하면 된다"고 맞섰다. 재선그룹 쪽도 당장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데는 부정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장 출신의 원로

중진인 김원기 의원은 의총 말미에 "현 시점에서 정계개편 논의기구를 만들면 자칫 성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아진다"고 당내 특별기구 설치에 이의를 제기, 논란을 정지했다. 결국 의총에서는 당내 특별기구 설치 없이 비대위 중심으로 정계개편을 준비하는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노대통령 '송송론'=친노와 비·반노 세력이 극명한 대치전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양쪽 세력 내부에서도 입장차가 갈라지는 양상이다.

청와대 참모 출신이 주축이 된 친노직계 그룹 의견은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합신당을 지지하는 비·반노 세력에서는 노 대통령과 '선긋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미 김한길 원내대표가 최근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은 정치현안에는 개입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이어 핵심 당직자들이 '각계각진' 식으로 노대통령과의 관계정리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깃발 올린 고건...정계개편 금물살

신당 창당 선언 파장

둘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지 않았던 고건 전 국무총리가 2일 독자신당 카드를 꺼내놓고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고건 총리의 독자신당 카드는 정계개편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에 상당한 파급효과 예상되고 있으며 연말 정계개편 과정에서 '고건 신당'은 태풍의 핵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날 고건 총리가 독자 신당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고 정치권에서도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더 이상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당 창당 카드로 대신 레이스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하락세를 보이던 지지율을 상승세로 반전시키고 추후 이뤄질 정계개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아 여론의 대선주자로 자리 매김하겠다는 것이다.

고건 총리가 이날 내세운 신당의



고건 전 총리가 2일 충북미래희망포럼 개소식서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형태는 정치권에서 중도실용개혁 노선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창당 과정은 '중도실용개혁 세력의 해체모여식'으로 모이는 것이다.

그는 "국가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 냉전 수구세력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진보세력에서 개혁적 보수세력까지 아우른다"고 신당의 성격을 규정, 극우와 극좌는 사절하겠다는 뜻

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과연 '고건 브랜드'의 파워. 오는 12월로 제시한 창당 본격화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현역의원들이 가담하게 될 지가 관건이다. 이는 대선 가도에서 고건 전 총리와 신당의 파급효과 직결되는 문제다.

고건 총리는 "지금 이 단계에서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 지에 대해 예단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어느 당에 소속돼 있든지 간에 정파를 초월해서 (신당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당장 정치권 인사들이 고건 진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건 총리가 깃발을 올렸다고 해서 20~30명 정도로 추정되는 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말을 갈아타는 결정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건 신당의 성공 여부는 떨어진 지지도를 만회 여부에 달려 있다"며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정계개편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